

2021. 01. 11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연합뉴스

[기사링크](#)

(요약) OCI, 현대차그룹과 재사용 배터리 활용 ESS 실증사업 개시

- OCI의 자회사인 OCI Power, 현대차그룹과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를 통한 ESS 실증 사업을 본격화
- 공주공장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소에 현대차그룹의 300kWh급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ESS를 설치

OCI의 자회사인 OCI Power는 현대차그룹과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를 통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0일 밝혔다.

OCI에 따르면 OCI스페셜티 공주공장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소에 현대차그룹의 300kWh급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했다.



OCI는 이곳에서 기존에 설치했던 타사의 신규 배터리 ESS와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ESS 간의 성능비교 분석을 할 계획이다.

양사는 2019년 9월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해 ESS와 태양광발전을 연계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OCI는 한국 공주와 OCI 솔라 파워(Solar Power)가 위치한 미국 텍사스주에 실증사이트를 구축하고, 전력변환장치 설치와 운영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를 제공하고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OCI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현장에 ESS를 설치하며 분산형 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1. 01. 11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링크](#)

(요약) 文대통령 "수소경제·저탄소산업 육성 등 세계시장 선점할 것"

- 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에서 올해 안에 산업 및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 계획 구체화 예정
- 수소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해 세계시장 공략 계획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올해는 기후변화협약 이행 원년이다"며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21년 신년사'를 통해 "**그 노력을 확대해 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며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 01. 12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부산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058462>

(요약) 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ESS 실증사업 본격 개시

- 국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인허가 규정이 정립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재사용 사업에서 특례 승인
-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변동성 큰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활용 효율을 극대화 기대

현대차그룹은 10 일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를 재사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태양광 발전소를 연계한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인허가 규정이 정립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웠던 재사용 사업 영역에서 최근 현대차그룹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음으로써 본격적인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통해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태양열과 수력, 풍력, 조력, 지열 등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활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수집분석되는 데이터는 국내 관련 인허가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로 용도를 다한 배터리 물량이 수년 내 증가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배터리의 재활용·재사용 사업이 글로벌 친환경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전기차에서 회수된 배터리 활용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wks 2018 년 세계적인 에너지기업인 핀란드의 바르질라 파트너십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한국수력원자력, 파워로직스, OCI, 한화큐셀 등과 다양한 기술 제휴협약을 맺고 전략적인 사업 전개를 준비해왔다.

현대차그룹이 본격적인 착수에 나서는 이번 실증사업은 2018 년 지어진 현대차 울산공장 내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2MWh 급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ESS 에 저장했다가 외부 전력망에 공급하는 방식의 친환경 발전소 형태로 운영된다. 더불어 정부에서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의 확보·판매를 통해 국내 탄소 감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2MWh 는 4 인기준으로 5 가구가 한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을 위해 국내의 일정 규모 이상 발전 사업자에게 정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다. 의무 대상자인 발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외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인증서를 거래시장에서 조달 수 있다.

현대차그룹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실증사업은 향후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3GWh 급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ESS 보급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차그룹 에너지신사업추진실 오재혁 상무는 "정부부처 규제 샌드박스의 신속한 승인으로 추진하게 된 이번 실증 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의 노하우를 선제적으로 축적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을 통해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는 물론, 공해가 없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 01. 12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642993?sid=101>

(요약)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문제 사과...“빠르게 공급대책 마련하겠다”

-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 마련
- 주거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과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 대책 수립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취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 1층 로비에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주택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도 "주거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과제"라며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 01. 13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연합뉴스

기사링크

(요약) 올해 공공기관 채용 45% 이상 상반기에 공무원도 3만6천명(종합)

- 1분기 공공부문 집중 채용...올해 공무원 3만6천명 새로 뽑아... 청년여성 고용대책 마련...민간 일자리 유지 지원
- 지난해 22년 만에 연간 취업자 최대 감소 폭 기록... 2021년에도 코로나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고용시장 침체 예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분기 고용 창출에 속도를 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공공기관 채용 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기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직접 고용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상

반기 채용 인원을 지난해 33%에서 올해 45%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올해 채용 인원의 절반 가까운 인원을 상반기에 채용하는 것이다. **내주 발표 예정인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도 지난해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들의 고용시장 어려움을 감안해 공공기관에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은 지난해(2만5천700명)보다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 중 공공기관 인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연간 2만2천명 규모의 체험형 인턴을 채용하고, 향후 공공기관이 인턴을 정식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경영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올해 공무원도 3만6천명을 새로 채용한다. 구체적으로 경찰·해경·소방 등 공공 필수 인력을 3만명 이상 신규 채용하고 국가공무원 579급 등 6천450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다.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152개 지방 공기업도 1월부터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 아울러 올해 계획된 직접 일자리 사업 인원 104만2천명 중 80%에 달하는 83만명을 1분기 중 채용한다.

이 가운데 대중교통 시설 등을 대상으로 생활 방역을 지원하는 지역 방역 일자리가 신설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8천개도 1분기 중 채용을 마무리한다. 이는 올해 새롭게 발굴할 예정인 사회서비스 일자리(6만3천개) 가운데 44%에 달하는 규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올해 1분기 중 청년고용 활성화방안과 여성 일자리 확대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중 청년 1만7천명에게 산업직종별 일 경험을 지원하고 청년 구직자를 위한 기업 정보 검색 플랫폼을 구축한다. 청년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도 1분기 중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소득재산 등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월 50만원 상당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시작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을 막고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을 1월부터 신규 지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 및 노동시장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일자리 예산 중 집행관리대상 예산이 38%인 5조1천억원은 1분기 중 조기 집행한다. 특히 1분기 중 40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종료가 임박한 사업장은 중점 관리 사업장으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3월에 지정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여행업관광숙박공연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정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이외에 정부는 혁신 벤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1분기 중 '포스트코로나 시대 원활한 직업 전환 지원방안'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원활한 직업 전환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천690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8천명 감소하며 1998년 이래 2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12월 취업자 수는 62만8천명 줄어 1999년 2월(-65만8천명) 이후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고용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에서 지난해 연초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1~2월까지 지표상 힘든 고용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1. 01. 13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매일경제

[기사링크](#)

(요약) 변창흠 "서울에 주택 공급할 방법 많아...집 마련 걱정 없어질 것"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한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자신감 피력
-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에는 여전히 부정적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민들은 서울에 집이 공급되기 어렵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는 자리에서 "현장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고, 실제로 많이 공급을 해봤다"며 "공급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공급이) 안되리라 생각했던 부분도 인허가 통지를 하거나 하면 가능해지고, 많은 부분이 공급되고 있다"며 "그런 안정감만 주면 국민들도 '지금 집을 사야 하나' 하는 걱정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5년간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정책들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병석 의장은 "신규 공급에는 몇 년이 걸리니, 시장에 주택난이 완화되고 가격도 내려간다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는 시장에 줄 시그널이 아니다"라고 화답했다.

2020. 01. 14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출처) 디지털타임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9&aid=0002648768	
(요약) 정부 “美에 전기·수소차, 중동에 태양광 수출”...K-뉴딜’ 글로벌화 대책 발표 - 선진국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수소차, 신흥시장은 그린뉴딜, 에너지 다각화 시장에는 태양광 설비를 수출 -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으로 해외시장 선점을 통한 국내일자리 창출 확대라는 선순환 확립	
<p>정부가 '한국판 뉴딜' 관련 산업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K-뉴딜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미국 등 선진 시장에 전기수소차 투자를 늘리고, 중동지역에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장별 특성에 따른 프로젝트를 발굴해 수출수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에 5년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도 공급한다.</p> <p>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 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 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p> <p>이번 전략은 한국판 뉴딜의 양대축인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과제를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DNA(데이터네트워크)융합산업 △지능형정부 △스마트 SOC △비대면산업 등 7개 대표산업 분야로 분류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한 것이다.</p> <p>우선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해외시장을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 성숙시장,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 성장시장, 인나필리핀 등 분산전원 유망시장,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에너지 다각화시장 등 4대 전략시장으로 나누고 특성에 맞게 유망 프로젝트 발굴에 나선다. 탄소중립을 선언한 선진 성숙시장에는 재생에너지 및 전기수소차 투자를 늘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 성장시장에는 그린뉴딜 ODA 연계, 태양광이 풍부한 에너지 다각화 시장에는 태양광 설비 수출수주를 집중 지원하는 식이다.</p> <p>정부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해외수주지원협의회 내에 민관합동 그린뉴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금융조달, ODA, 컨설팅 등 프로젝트 수출수주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베트남칠레 등 3개국 코트라(KOTRA) 무역관 내에 '그린뉴딜 수주 지원센터'도 설치한다.</p> <p>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를 최대 10%포인트 확대,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p> <p>수주 이전에는 해외 발주처에 우리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먼저 제공하고, 수주 이후에는 생산시설확충, 운전자금,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도 확대한다.</p> <p>디지털뉴딜 분야에서는 올해 1분기 출범하는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통해 디지털 및 타 분야 기업까지 포괄하는 선단형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한다.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7개소까지 확대하고, 비대면산업의 경우</p>	

사업 초기부터 현지 기업자본과 협업해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현지 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현지화 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해 해외시장 선점을 통한 국내일자리 창출 확대라는 성과확산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4대 전략시장별 특성 및 진출전략 >

1	선진 성숙시장 (미국, EU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망)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등 투자 확대 · (진출전략) 공동R&D투자 등 협력 확대, 민자발전 활용 수주 확대
2	신흥 성장시장 (동남아, 중남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망) 전력수요 증가, 풍부한 자원 등으로 시장성장 가능성 高 · (진출전략) 그린뉴딜 ODA 연계, 다자개발은행(MDB) 활용 등
3	분산전원 유망시장 (인나, 필리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망) ESS 연계 소규모 도서지역의 독립계통형 시장 형성 · (진출전략) 신재생+계통설비 패키지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추진
4	에너지 다각화시장 (사우디, UA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망) 풍부한 태양광 등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 (진출전략) 태양광 연계 담수화 관련 설비진출, R&D협력 등

(출 처) 서울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56093>

(요약) "코로나 예방 접종"...韓도 백신 여권 도입 검토

- 입학, 출국, 취업 등의 증명을 위한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어 구체적인 시스템을 연구하기로
- 다른 나라가 백신 여권을 도입하는데 우리나라가 안하면 우리만 여행을 못가,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이 중요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여권' 도입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시행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입학출국취업 등의 증명을 위한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어 접종 완료 시 증명서 발급 가능 방법, 발급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시스템으로 사실상 백신 여권 도입을 위한 준비로 풀이된다.

이선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다른 나라를 갈 때에도 (일부 국가의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한다”며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일반 예방접종하고 다른 측면이 있다 보니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장은 “백신 여권이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을 때 정부 차원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말해 실제 도입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속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영국이스라엘 등에서는 백신 여권 도입이 임박했다. 12일(현지 시간) 일간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백신 여권 시험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험 참가자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여권을 발급받는다. 이스라엘은 백신을 2회 모두 맞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녹색 여권'을 이달 중 발급한다. 미국에서는 IBM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헬스 패스' 앱을 개발했고, 스위스에서 관련 앱 개발이 한창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다른 나라가 백신 여권을 도입하는데 우리나라가 안 하면 우리만 여행을 못 간다"면서 "(시기에 맞춰)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국가 '백신 여권' 도입 현황

영국	백신여권 시범 도입
이스라엘	'녹색여권' 이달 중 발급
스위스	'코먼패스' 앱 개발 중
미국	IBM, '디지털 헬스 패스'
한국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세계 공동	'트래블 패스' 1분기 출시

(출 처) 에너지타임즈

기사링크

(요약) 그린뉴딜 수출 2025년 30GW까지 확대 방점

- 수출과 수주의 집중 지원을 통해 2019년 15GW 규모인 그린뉴딜 프로젝트 수출을 2025년 30GW까지 확대
- 그린뉴딜 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및 컨설팅 제공 예정



정부가 2019년 발전설비용량 기준 15GW 규모인 그린뉴딜 프로젝트 수출을 2025년 2배인 30GW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단계부터 수출전략을 병행해 해외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확대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하고 13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중로구 소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린뉴딜 분야에서 ▲선진성숙 ▲신흥성장 ▲분산전원 ▲에너지다각화 등 4대 전략시장별 특성에 맞춘 유망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과 수주를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2019년 발전설비용량 기준 15GW 규모인 그린뉴딜 프로젝트 수출을 2025년 2배인 30GW까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수주지원협의회' 내 '민관합동 그린뉴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뒤 유망한 프로젝트를 발굴한 뒤 금융조달공적개발원조(ODA)컨설팅 등 프로젝트 수출과 수주를 위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또 미국베트남칠레 등 3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 내 '그린뉴딜수주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지 주재 기관들의 개별지원을 통해 제공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그린뉴딜 수출 확대를 위해선 금융지원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앞으로 5년간 30조 원 규모 수출수주를

위한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 확대와 추가 금리 혜택 등의 우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주 전 해외 발주처에 우리 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보증 한도를 우선 제공하는 한편 수주 후 생산시설 확충과 운전자금, 수출채권 현금화 등에 대한 수출보증과 수출보험 등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유기술과 수주계약서 등에 기반한 특별심사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증과 수출보험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조사시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공공성 비중을 35%에서 40%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으로 원활한 프로젝트 수주와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더해 사업성 평가수수료 50% 감면 등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그린뉴딜 분야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대책도 이 전략에 포함됐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참여도가 높은 ODA 중 그린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인 22.7%까지 확대해 그린뉴딜 분야 개도국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또 ODA 후속사업 추진 시 타당성조사를 우대해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냄으로써 ODA와 후속사업을 연계시켜 시장 선점의 기회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2021. 01. 15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매일경제

[기사링크](#)

(요약) 바이든표 2조弗 `슈퍼 부양책` 나온다

- 이번 부양책에는 개인 현금 지급, 실업보험 지원, 코로나19 백신 지원,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 포함 예상
- 하지만 미 정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재정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하여 부담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조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CNN은 13일(현지시간) 바이든 참모들을 인용해 최근 미국 의회에 이 같은 부양책 규모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14일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부양책을 발표한다.

이번 부양책에는 개인당 2000달러 현금 지급, 실업보험 수당 지원,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재정난에 봉착한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당시 슬로건이었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에 기초한 장기 부양책을 함께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양책 규모는 조정될 수 있지만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되는 척 슈머 상원의원(민주당뉴욕주)이 제안한 1조3000억달러보다는 훨씬 크다. 이번 부양책은 민주당이 백악관은 물론 상하원을 다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이 의지만 있다면 속전속결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지원금을 2000달러로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의회에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당선인은 연초 조지아주 결선투표 지원 유세 당시 "1월 중 추가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통해 국민에게 2000달러씩 보내겠다. 취임 즉시 2조달러, 혹은 3조달러 규모의 초대형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3월 팬데믹 발생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3조7000억원 규모 부양책을 마련해 경기 살리기에 나섰다. **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로 부양책을 쏟아내다 보니 미국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재정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5729억달러를 기록했다. 재정적자가 심각해져 의회에서 규모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달러값이 상승했다. 달러인덱스는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90.25에서 15분 만에 90.50까지 치솟았다.

한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13일 공개한 베이지북에서 경기 상황에 대해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완만하게(modestly)'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베이지북에서 "완만한 혹은 보통(modest or moderate) 수준으로 확장했다"고 밝힌 것에서 다소 후퇴한 것이다. 연준은 경기 판단 시 'moderate'보다 경기 상황을 한 단계 낮게 평가할 때 'modes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이날 별도 강연에서 필요시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채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며 완화적 통화정책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부인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베이지북에는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도 실렸다.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로버트 캐플런 델러스 연은 총재는 올해 5% 성장을 예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미국 일자리 시장 회복세가 크게 악화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1월 2~9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6만5000건을 기록해 전주보다 18만1000건이 증가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80만건)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